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파격' 대신 '현실' 택했다

수정안서 양도세 20% 이양 등 수치 삭제…보통교부세 보정으로 선회
문체부·농협중앙회 이전 기관 명시도 제외…정부 거부감 최소화 전략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 조항도 삭제…알맹이 빠졌다는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기틀인 특별법안을 마련하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흔적 이 역력하다.

지난 1월 28일 마련됐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수정안)'이 지자체의 희망 사항을 최대치로 담은 '이상적 청구서'였다면, 최종 입법 발의 단계에 오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발의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은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실적 타협안'으로 분석된다.

명칭부터 변경됐다. 당초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두 광역단체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했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인 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조항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명칭이 대거 삭제되거나 완화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됐다.

◇구체적 '세수 확보'에서 포괄적 '보정'로… 재정특례 대폭 후퇴=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돈줄, 즉 재정 지원 방식의 변화이다.

수정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꿈꾸던 재정 분권의 청사진이 담겨 있었다. 당시 초안 제41조는 통합경제지원금 명목으로 관할 구역 내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20%, 부가가치세의 2.2%, 법인세의 2.2%를 떼어내어 통합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았다.

또한 제43조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2%에서 1.3%를 정률로 지원해달라는 '통합특별교부금'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마련된 발의안에서는 이 같은 '숫자'들이 모두 사라졌다.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국세의 직접 이양 방식 대신,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방식(차액의 25% 가산 등)으로 변경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강원특별자치도 등 타 특별자치시도가 적용받는 일반적인 특례 방식으로, 재정 확보의 강제성과 규모 면에서 수정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를 우려해 파격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농협' 꼭 짓었던 조항 삭제…유치 전략수정=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정 공법'에서 '후회로'로 변경됐다.

당초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특

정 중앙부처와 농협중앙회 등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법안에 명시하여 이전을 못 박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광주·전남의 강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발의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농협중앙회와 같은 구체적인 기관명이 전면 삭제됐다. 특정 기관을 법률로 명시할 경우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비로 인해 법안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공공기관 유치 시 '우선 배정' 및 '2배 우대' 조항은 유지했다. 실리를 쟁기면서도 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해 가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타깃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유치 경쟁에서 정부를 압박할 법적 명분은 다소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삭제…노관 제거= 지역 내 최대 갈등 요소이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국립외과대학 설립 조항도 손질됐다.

수정안 제348조는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에 부속병원을 둔다고 명시해 의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발의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제330조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남겨뒀다.

의대 신설 문제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추후 과제로 넘기겠다는 의도지만, 지역민들의 숙원인 의대 유치에 대한 확약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발 속도전 의지는 유지=여러 후회 속에서도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는 살아남았다.

두 법안 모두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해 "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강력한 특례 조항을 유지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인프라 구축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드는 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음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수정안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리는 '이상향'이었다면, 발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현실적 전술서'다. 국세 20% 이양이나 특정 부처 이전 명시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는 중앙정부의 높은 벽 앞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변경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가시를 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시행령 제정이나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재정 지원과 기관 유치 내용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살려낼 수 있을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가운데)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왼쪽)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시·도의회,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동의안 4~5일 중 의결

광주 의원 확대 합의안 포함 안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절차인 시·도의회 동의 절차가 오는 5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양 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기탁을 잡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동의안 처리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와 보조를 맞춰 4~5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조율해 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 의회는 그동안 진행된 5개 차지 구별 공청회와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시·도 의회와 통합추진기획단 간의 줄다리기 끝에 '의회 관한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출범활 통합특별시의회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며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거대 해지는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 권력을 경제하기 위해 의회의 체급을 그에 걸맞게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통합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 권한을 보장하고, 특별시가 추진하는 대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전제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광주 지역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치권 내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일단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되, 의원 정수 조정과 같은 미해결 과제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기획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찰시키겠다는 '선(先) 동의, 후(後) 보완' 전략을 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선정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전남이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트'에 국민성장펀드 7500억원을 선·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성장정책으로, 정부와 금융권, 국민이 150조원을 조성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신안 도초면 우이

도 남측 해상에 15MW급 발전기 26기를 설치해 39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 조성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교정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형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형일: 2026. 1. 29.(목) 오후 2시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전형일: 2026. 2. 6.(금) 오후 2시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면지로 36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